

학교안전 혁명, 'No촬! 솔루션'

(부제: 불법촬영 없는 안전한 학교 조성)

2023. 10.

교육부

교육부

학교 안전 혁명, 'No찰! 솔루션'

(부제: 불법촬영 없는 안전한 학교 조성)

□ 추진배경

- 그간, 학교에 대한 불법촬영 점검·단속 등 근절·예방 노력에도 사건 발생은 계속되고, 교직원 동원 불만, 적발위주 근절 대책의 한계·무용론* 등 대두
 - * 시도교육청이 '19~'23년 동안 연간 1억 원 상당 불법촬영 점검 예산에도 학교 점검 실적은 0건, 행안부·지자체도 '18년부터 매년 50~100억원의 공공기관 점검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적은 0건
 - 이에, 학생들이 '불법촬영' 등 성범죄로부터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새로운 관점의 '지속 가능한' 성범죄 예방·근절 정책 代案 필요

□ 추진내용

- **['학생 주도형 학교안전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중점과제 선정^(2.22 사회관계장관회의)
 - * 학생 주도형 캠페인 시범 초등학교 현장 방문^(3.16, 경기광명 광덕초), '365일 안전한 캠퍼스 조성을 위한 대학생 간담회 및 캠페인' 행사 현장 참여^(4.26, 건국대, 교육부총리·이태규 국회의원)
- **['지속 가능한' 정책 모색]**으로 새로운 관점의 성범죄 예방·근절 대안 발굴
 - '교사·학부모단' 4.5천명 대상 설문 결과를 통해 합리적 대안 발견^(23.2)
(보여주기-적발위주' 답습 ⇨ '학생참여 사회연대·예방 중심'으로 전환 필요)
 - 홍보 분야 민간 전문기업과 함께 '정책홍보 전략기획 컨설팅' 본격 수행^(23.8)
- **['현장 공약형' 적극 행정]**을 통해 관계부처·기관들의 참여 및 협업* 유도
 - * 행안부(재난안전연구개발과, 주소생활공간과), 문체부·서울광진경찰서 관계 공무원, 유관 전문기관(한국교육환경보호원,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등) 관계자들 설득(기관 간 협업 약속 및 '국민정책디자인단' 참여 등 유도)

□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사회연대(가정-학교-지역-국가)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범죄 근절·예방 모델 개발
 - ※ **국정과제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 '범부처 교육현장 중점과제'로 지속 관리
- "학교 불법촬영 근절·예방 환경 조성 지원" 특별교부금 사업 추진^(23년 9억 원 예산확보)
 - * '학교 불법촬영 예방센터' 중심의 피해자·사건 신속 지원체계 구축 및 (상시)운영^(23.10말~)

< 국민정책디자인 운영 전·후 비교 >

국민정책디자인 운영 前 (AS-IS)	국민정책디자인 운영 後 (TO-B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속 행정) 적발 시 처벌로만 단죄하는 행정편의 차원의 전형적인 '보여 주기식' 대책 일색 • (부정형 회피) '불법촬영 = 화장실'로 직결되는 학교 공간의 '부정적 인식'이 만연한 현실 • (저효율 답습) '정부 정책'과 '일선학교 시책'이 따로인 '주관적 안심 조치'만 반복되고 답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행정)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주체의 참여로 공감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연대 운동' • (긍정형 공감) 학교 쉼 공간은 우리사회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라는 인식의 대전환 가능 • (참여형 혁신) 국민이 함께 만드는 정책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창조적 긍정 변화' 기대

□ 향후계획

- 「학교 디지털 성범죄 근절·예방 정책 모델」 개발로 정책 응용 분야 확대
 - * 'No찰 솔루션' 성공 모델을 응용하여 '학교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책모델 개발에 적용

1 학교 안전 혁명, 'No찰! 솔루션' (교육부) (부제: 불법촬영 없는 안전한 학교 조성)

과제유형	② 기획·협업과제	정책분야	생활안전, 어린이/교육
주관기관 (협업기관)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17개 시도교육청 및 일선 초·중고 3개 학교, 건국대·공주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교육환경보호원,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과제담당자	사무관 전건우, 주무관 이준세·김민지 연락처 : 044-203-7111, 7113, 7114 이메일 : gunwooya@korea.kr, leejunse@korea.kr, candy2395@korea.kr

1 과제 개요

- ◆ (사업목표) '불법촬영'으로부터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새로운 관점의 '지속 가능한' 교육분야 성범죄 예방·근절 정책 모델 개발
- ◆ (주요고객) 전국 2만 여개 학교 등 교육기관의 아동·청소년·교직원 등 약 1천만 명
- ◆ (추진기간) '23. 2. ~ '25. 12. (정책기획·범부처 협업 장기과제)
- ◆ (소요예산) ('23년) 900백만원(교육부), 2,000백만원*(행안부) ➔ ('24년안) 1,000백만원(교육부)
 - *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시범)사업 등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23년(행안부)예산 총 2,000백만원
- ◆ (추진내용)
 - **(국민참여)** 사회(가정-학교-지역)가 연대하여 지속 가능한 '안전한 학교 모델'을 디자인하기 위해, 국민이(학생·학부모·교사·전문가 등) 함께 만드는 '정책디자인' 활동을 통해 학교 디지털 성범죄 근절 의지 공유
 - 학교 불법촬영 문제가 사회관계장관회의('23.2)에서 '교육현장 중점과제'로 지정된 후,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참여' + '사회연대'를 매개로 한 지속 가능한 정책 대안 발굴 필요성 재확인
 - * '교사·학부모' 4.5천명 대상으로 학교 불법촬영에 대해 의식을 조사한 결과('23.2.24), ① 불법촬영 근절·예방을 위해 '가정-학교-지역' 연계형 인식 개선이 시급하고(82.3%), ② 학생·학부모 참여가 필요하다(75.0%)고 응답함
 - **(문제해결)** 학교 불법촬영 등 성범죄 위험 요인을 예측하고, 선제 대응하기 위해 관계 부처 간(행안부·경찰서) 협업하고,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해 학교 불법촬영 예방센터* 지정(상설)운영('23.10.~)
 - * '한국교육환경보호원(오송)'을 사업수행 전문기관(예방센터)으로 지정하여, "학교 불법촬영 근절·예방 환경 조성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23년 특·교 사업 예산(9억 원) 조기 확보 [① '학교 내 불법촬영 근절·예방 인식 확산 지원', ② '실태 조사 및 예방·근절 콘텐츠 개발·보급', ③ '현장지원 컨설팅 및 점검체계 구축·관리 지원']
 - 불법촬영 관련 부정적 선입견으로, 학교·(공공)기관 등 '협업 파트너'의 섭외가 곤란했으나, 시범학교 캠페인 동참 등 '현장 공략형 행보'를 통해 교육청·정부·전문기관 설득·협업 성공
 - **(전문관리)**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학교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예방 정책의 지속성과 기획·실행·홍보 등 활동 강화를 위해 관계 부처(기관) 및 민간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
 - '정책홍보 전략기획 민간컨설팅('23.8, 문체부)', 골든타임 내 성범죄 피해자 구난·구호 및 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재난트라우마센터' 운영 노하우를 벤치마킹*
 - * 전문가 자문단 운영·컨설팅 체계, 홍보·교육, 정책연구 등에서 재난트라우마센터 운영 노하우 등

2 추진배경

【추진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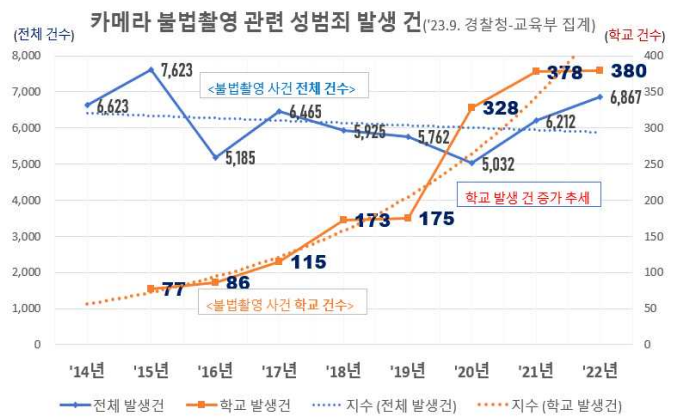
- ‘학교 내 불법촬영’으로부터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학생과 함께· 새로운 관점의 ‘지속 가능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근절 정책 모델 개발

□ ‘누구나 공감’ 되고 ‘지속 가능한’ 정책 필요

- 그간 불법촬영 점검 등 근절 노력에도 사건 발생은 계속*되고 있고, 교직원 동원 거부감, 적발 위주책의 한계·무용론 대두 등으로 교육계 현장의 정책 반발 고조

< *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 발생 현황 (23.9. 경찰청-교육부 집계자료) >

연도	사회전체		학교내		비고
	건수	증감율	건수	증감율	
'14년	6,623	-	-	-	① 사회전체 매년 5-6천여 건 이상 사건 발생(日 평균 17건 이상 불법촬영 사건)
'15년	7,623	15.1%	77	-	
'16년	5,185	-32%	86	11.7%	
'17년	6,465	24.7%	115	33.7%	
'18년	5,925	-8.4%	173	50.4%	
'19년	5,762	-2.8%	175	1.2%	② 학교 내 불법 촬영 증가율은 최근 5년간 ^{16~22년} 年 평균 28%대 가파른 증가
'20년	5,032	-13%	328	87.4%	
'21년	6,212	23.4%	378	15.2%	
'22년	5,118	10.5%	380	0.5%	



- 기존, 점검·단속 위주 대책의 한계가 분명하고(19~23년 불시점검 실적 0건),
- 코로나-19 종식 이후, 대면 교육활동 재개 등으로 학교 내 불법촬영 등 교육 분야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누구나 공감할 만한 합리적 대안이 시급하여,
- 학교 현장의 사안별 문제점과 관련 수요*를 신속히 파악해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인 근절·예방 대책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책 단계별로(기획·시범·전도) 교육의 주체이자 정책 수요자들인 학생·학부모·교사·시민 등 국민의 적극적 참여 보장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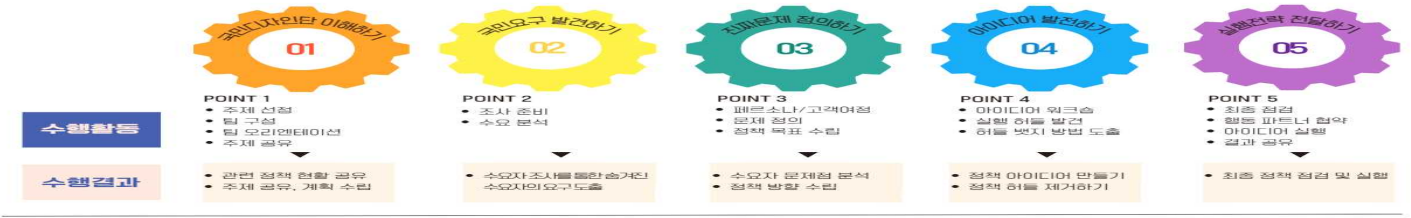
* ‘교사·학부모’ 4.5천명 대상 대규모 설문조사^(23.2) 분석 결과, ① 불법촬영 근절·예방을 위해 ‘가정-학교-지역’ 연계형 인식 개선이 가장 시급하고^(82.3%), ② 학생·학부모 참여가 필요하다^(75.0%)고 응답

□ 사회연대로 ‘확장성 있는’ 정책 필요

- 디지털 성범죄 특성 상, 보다 근본적인 사건 근절·예방을 위해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 연대(가정-학교-지역-국가)를 통한 ‘확장성 있는’ 성범죄 근절·예방 정책 모델 개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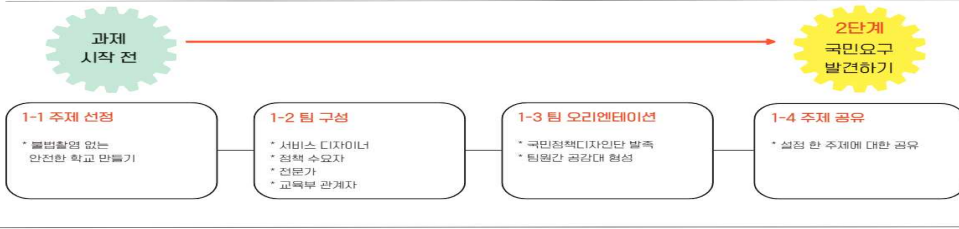
※ **국정과제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 ‘범부처 교육현장 중점과제’로 지속 관리

진행 프로세스



1 국민디자인단 이해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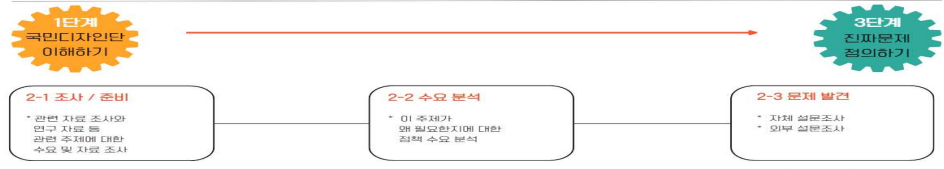
대상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조사 목표를 설정



현장 조사를 통해 국민의 '숨겨진 요구사항' 을 발견하였고, '국민디자인단' 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학생·학부모·전문가로 '국민정책디자인단' 을 구성·운영

2 국민요구 발견하기

현장에서 국민들을 만나고 관찰하면서 숨겨진 요구사항을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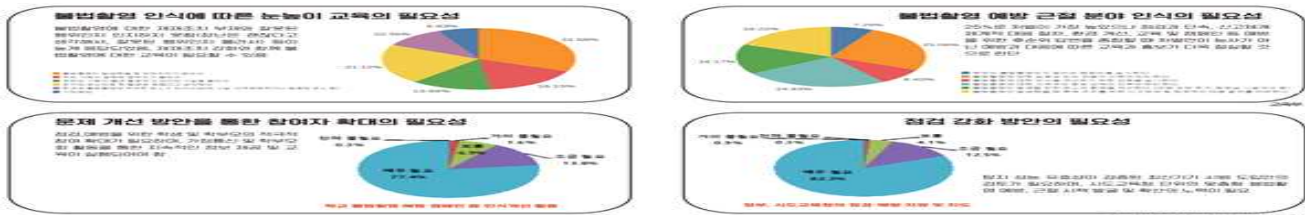


'국민디자인단' 을 구성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설정하여 앞서 발견한 국민의 문제가 진짜 문제인지를 정의함

○ '교사·학부모정책단' 4.5천명 대상 설문조사^(23.2) 결과를 분석한 결과,

* ① 불법촬영 근절 예방을 위해 '기정 학교지역 연계형 인식 개선이 시급함'^(82.3%), ② 학생·학부모 참여가 필요하다^(75.0%)

설문조사 결과



3 진짜문제 정의하기

앞서 발견한 요구사항들이 수요자의 진짜 문제인지 점검하고 주요 이슈를 도출하는 단계



현장에서 수요자를 만나고 관찰하면서 다양한 요구를 발견하고, 정의 내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전시킴

※ 페르소나 워크숍 : 고등학생 대상 경험 접근 워크숍 / 국민정책디자인단 라운드테이블 : 유관기관, 전문가, 초·중고대학생 / 대안 마련 아이디어 회의 : 수요자, 교사, 학부모, 전문가 집단

○ '수요자' 중심의 진짜 문제 파악 과정을 통해 정책 관련 주요 이슈 도출

▪ 페르소나, 라운드 테이블, 아이디어 회의 등을 통해 '불법 촬영' 관련 수요자의 다양한 니즈 파악

※ '학교 불법촬영' 관련한 교육의 부재를 비롯해 기존 학교 교육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옛보임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콘텐츠 노출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예방 교육에 대한 이슈가 지배적이며 '불법촬영 관련 피해 사례의 양상이 다양함에 따라 현장을 이해하는 유기적인 대안에 대한 솔루션의 필요성 제안

05 학교 교육보다, 선배나 청년 세대의 조언이 공감될거예요. 인터넷 불린지도 하고, 인물 부연서나 연애인의 도움을 받아도 좋고요.

05 영상 발견을 해도 관계가 생겨나요. 같애서 일어나는 게 두렵고요.

05 가족사 현장실에서 불법촬영 흔적일 분 적이 있어요. 이후로 낯선 곳이나 화장실을 둘러보는 변태야 생각어요. 피해를 당하지 않았는데도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아요.

05 '백괴담이 죽어가고 있어요'처럼 각인될 수 있는 감각적이고 정서적인 홍보 메시지가 필요해요.

05 학교 교육보다, 선배나 청년 세대의 조언이 공감될거예요. 인터넷 불린지도 하고, 인물 부연서나 연애인의 도움을 받아도 좋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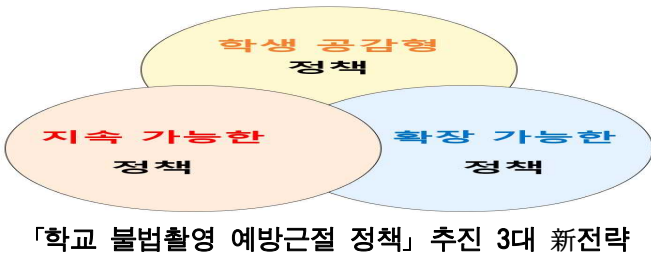
05 화장실을 귀찮힐 때 현역 구하는 데너를 알려줘야 할 것 같아요.

05 노출자 자동으로 저장되지 않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할 것 같아요. 음초적으로 막아야 해요.

05 사진전가에서 윤리 연식을 배우거나, 백일장 사생대회처럼 사진대회를 열어서 건강 한 사진 문화를 할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야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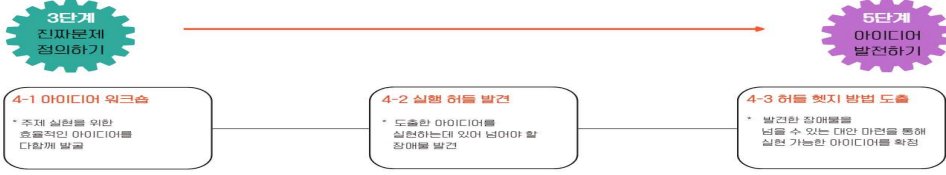
05 피해당한 것도 억울한데, 피해자 탓이 되면 더 억울할 것 같아요.

- '확장 가능한 정책'을 중심으로 '불법촬영 없는 안전한 학교'의 정책 방향을 수립
 - 수요자의 현장 니즈를 중심으로 다양한 요구를 발견, 이를 통해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학생 공감형 정책' 일회성 교육이 아닌 지속적인 예방이 지원되는 '지속 가능한 정책' 해결 솔루션을 지닌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확장 할 수 있는 '확장 가능한 정책'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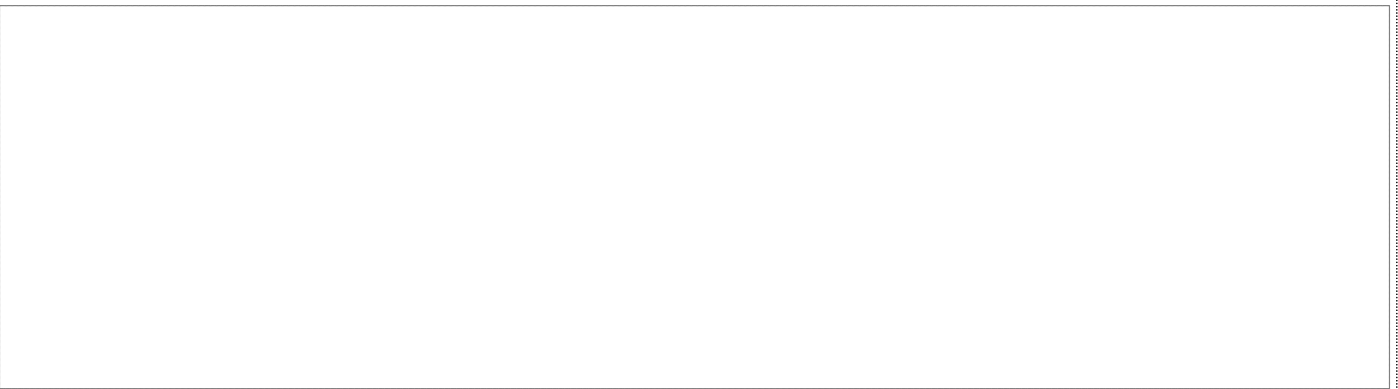
4 아이디어 발전하기

정의 내린 문제를 바탕으로 팀원들과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단계



앞서 발견한 요구사항들이 수요자의 진짜 문제인지 점검하고, 도출된 아이디어를 최종 점검하여 실행 전략을 수립하며 서비스를 전달함

- '불법촬영 없는 안전한 학교'를 중심에 둔 '불법촬영 지킴이' 『협업 시스템』 구축



※ '불법촬영 없는 안전한 학교'만들기 원활한 아이디어 실현 위하여 다양한 관계 부처와 협업 필요성 인지

- '현장 공략형' 적극 행정으로 관계 부처·기관의 참여 및 협업 유도
 - 불법촬영 관련 선입견 등으로, 학교 및 (공공)기관 등 '협업 파트너'의 섭외가 곤란하였으나, 학교 방문, 학생 캠페인 동참 등 현장 행보를 계기로 교육청, 정부, 전문기관 설득·협업
 - ※ 초등학생 캠페인 시범학교 방문^(3.16, 광명광덕초), '안전한 캠퍼스 조성 대학생 간담회·캠페인'^(4.26, 건국대 현장방문), 행안부 (재난안전연구개발과, 생활공간과), 서울광진경찰서 관계 공무원, 유관 전문기관^(한국교육환경보호원) 관계자들 지속 설득^(기관 간 협업등 유도)

5 실행전략 전달하기

아이디어를 최종 점검하고 실행전략을 수립하여 서비스로 전달하는 단계



정의 내린 문제를 바탕으로 팀원들과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지속적인 사업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함

- '혁신적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실행·홍보단계 쏠단계에 걸쳐 공익성 확인
 - '학교 불법촬영 근절·예방 정책'은 우리 사회 '가장 안전해야 할' 2만여 학교, 교육기관에서 정책 수혜자이자 교육주체인 아동·청소년·교직원 등 약 1천만 명에게 국민 일상생활 속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예방하는 촉진자 역할을 하므로 "국민 안전"과 '공공 이익 증진' 기대
 - * 국민참여형 문제해결 노력과 사회연대를 통해 'No촬' 캠페인의 브랜드화 및 지속 가능성 담보 가능
- '불법촬영 없는 안전한 학교' 모델 개발을 위해 국민참여형 '지속 가능한 정책' 디자인
 - '불법촬영 없는 안전한 학교(No촬!)' 학교 캠페인 등 학생 참여형 우수사례를 '지역단위' 및 '전국단위'로 발굴·확산하고, 문체부 정책홍보·컨설팅·여론조사 공모과제에도 모두 선정되어 국민 정책의 신뢰성과 확산성을 높이기 위한 홍보 기획 등을 착수하였으며, 학교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예방하기 위한 지원체계 개선을 위해 '불법촬영 예방센터' 운영(특·교*)
 - *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학교 불법촬영 근절·예방 환경 조성 지원"을 위해 '23년 특·교 사업(9억 원) 추진 (① '불법촬영 근절·예방 인식 확산 지원', ② '실태 조사 및 예방·근절 콘텐츠 개발·보급', ③ '현장점검 지원 및 점검체계 구축·관리 지원', ④ '지역 연계 양성평등 역사 교육자료 발굴·개발' 등)

< 학교 내 불법촬영 근절·예방환경 조성 지원 사업 추진 체계도 >

'23) 하반기		'23) 하반기 ~ (계속 추진)	
전문기관	현장지원	조사/컨설팅	조사·연구 + 인식확산·점검
한국 교육환경 보호원	운영관리 전문교육 점검지원, 모니터링	불법촬영 발생원인 진단·분석	교육연수 홍보·캠페인 합동점검
	점검체계 구축·정립	(현안공유) 시도교육청 실무협의회 운영	
	학교맞춤 활동 매뉴얼	(전문 컨설팅) 전문가 컨설팅단 운영	

학교 불법촬영의 왜곡된 낙인효과 등을 우려해, EBS와 협업해 인식개선 콘텐츠를 개발 중이고, 캠페인 참여에 소극적인 학교·학생·교사들을 위해 아동·청소년에 친숙한 유튜브 숏폼, 틱톡 등의 매체와 학생 크리에이터 등을 활용해 확산 가능성이 크고 지속 가능하면서도 경제적인 '긍정형 콘텐츠'를 개발 추진 중(홍보·컨설팅 진행 중)

< 주요 추진현황 및 계획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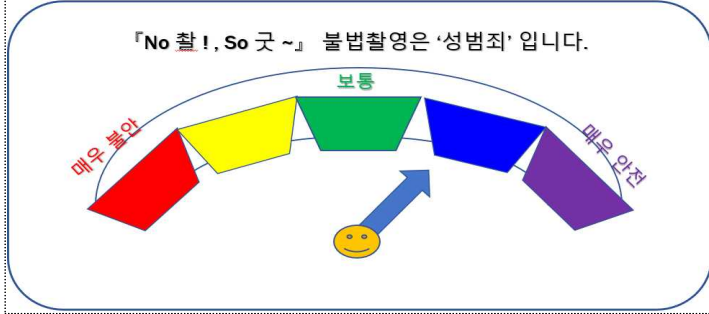
연도	주요 추진사항	소요 예산(백만원)
'23년	○ ('23.2.22) "2023 신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 발표"(사회관계장관회의, 중점인간 불법촬영 없는 안전한 학교 조성)	미소요
	○ ('23.4.26) 건국대 학생들의 "365일, 불법촬영 없는 우리대학" 캠페인 및 간담회 참관(부총리)	미산정
	○ "불법촬영 없는 안전한 학교 조성" 정책을 위한 2023 국민정책디자인단 활동 * 회의 경과 [재] 발대식(08.8) → [재] For '문제발견 원격회의'(02.1.수) → [재] For 'IDEA 발굴 원격회의'(7.7.목) → [재] For '페르소나 분석(서울대면회의)(8.4.금) → [재] For '리운드 회의(부산대면회의)(8.25.목) → [재] (오송대면회의)(9.13.수) → [재] 미정(10.初)	20백만원
'24년	○ ('23.8.24) 2023년 학교 내 불법촬영 근절·예방 환경조성 제3차 특교 사업 자금교부 및 추진 * 「학교 불법촬영 예방센터」 설치·운영비, 인식 확산, 조사·연구, 교육·관리 등에 비용 총당 ○ ('23.1~2) 2024년 공공화장실 비상벨 설치 사업 안내(시도교육청 및 학교 참여 신청)	900백만원 1,000백만원 미산정
'25년 ~	○ ('23.1~2) 2025년 학교 내 불법촬영 근절·예방 환경조성 제1차 특교 사업 자금교부 및 추진 * 「학교 불법촬영 예방센터」 설치·운영비, 인식 확산, 조사·연구, 교육·관리 등에 비용 총당 ○ ('23.1~2) 2025년 공공화장실 비상벨 설치 사업 안내(시도교육청 및 학교 참여 신청)	1,000백만원 미산정

가. 국민정책디자인단 구성 현황 (총 22명; 전문가 6, 수요자 10, 디자이너 2, 담당관 4)

구분		성명/소속/직위	역할
국민	분야 전문가 (교수, 연구원, 정부지자체 공무원 등)	홍세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사)	○ 「성폭력방지법」 등 법률상 불법촬영 범죄 분석, 수요자 설문조사 결과의 기술적 분석 및 자문 등 ※ 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경찰대학교 범죄학 박사)
		전민경 (부산시 교육청 장학사)	○ 학교 불법촬영 관련 시책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4년간 광역시교육청에서 양성평등 및 성인식개선 담당
		한상미 (건국대 인권센터 상담교수)	○ 불법촬영 관련 대학 모델 및 캠페인 의견 제시 ※ 심리학 박사
		김진희 (한국교육환경보호원 경영기획팀장)	○ 학교공간환경 분석, 불법촬영 예방센터 운영지원 ※ 도시공학 박사, 한국교육환경보호원 경영정책 및 기획팀 팀장 재직
		최영목 (행안부 주소생활공간과 서기관)	○ 학교 등 공공화장실 안전강화 및 인식개선 협업 ※ 아름다운화장실, (학교)공중화장실 등 국민 실생활의 안전 정책 담당
		김희순 (서울공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경감)	○ 관할 (대)학교 디지털 성범죄 실태 파악 등 협업 ※ 관할 건국대 등 학교 및 학생의 성범죄 예방 및 순찰 등 치안담당
	정책수요자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전진 (부산연산초등학교 교사)	○ 교육주체로서 불법촬영 관련 현장수요 의견 제시 ※ 성인식up 교사동아리 운영, 교사로서 문제의 원인 고민
		이규혜 (공주대 행정학과 조교, 박사과정 학생)	○ 교육주체로서 불법촬영 관련 현장수요 의견 제시 ※ 한국사회의 불법촬영 문제가 다른 나라와 다른 양상인 이유 고민
		장승원 (건국대 국어국문학과 4학년 학생)	○ 교육주체로서 불법촬영 관련 현장수요 의견 제시 ※ (여)대학생들의 캠퍼스 만족도와 불법촬영 불안지수 간 상관성 고민
		김민석 (건국대 경영학과 2학년 학생)	○ 교육주체로서 불법촬영 관련 현장수요 의견 제시 ※ 캠페인 유령자로서 불법촬영 문제의 근본적 문제와 대책에 관해 자문
		텃미얏웨이 (건국대 산림조경학과 1학년, 미얀마 유학생)	○ 교육주체로서 불법촬영 관련 현장수요 의견 제시 ※ 외국인 유학생 관점으로 본 한국의 불법촬영 실태에 대한 의견 자문
		김은영 (부산금명중학교 학부모)	○ 가정교육과 불법촬영 문제 간 상관성 여부 검토 ※ 부산교육청 성인식개선 학부모동아리 회장(부산 금명중 학부모)
		김석화 (부산남일고교 학부모)	○ 불법촬영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연대 의견 제시 ※ 인문학 서점 운영, 불법촬영 문제를 대하는 일반 어른들의 시선 관찰
		도예나 (부산영산고교 2학년 학생)	○ 교육주체로서 불법촬영 관련 현장수요 소통 ※ 불법촬영 등 학교내 사회문제를 학생이 참여해 주도하는 경험 공유
		강민형 (부산진중학교 3학년 학생)	○ 교육주체로서 불법촬영 관련 현장수요 의견 제시 ※ 전교회장으로서 학생들이 불법촬영 문제를 인식하는 인식 조사 등
		류윤서 (부산에원초등학교 6학년 학생)	○ 교육주체로서 불법촬영 관련 현장수요 의견 제시 ※ 초등학교생이 느끼는 불법촬영 문제와 그 대책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
	서비스 디자이너	서영식 대표 (주)이야기그룹 진담)	○ 국민정책디자인 서비스 목표 및 이행절차 코칭 ※ '21년 교육부 국민정책디자인과제(재난트라우마센터) 디자이너 경력
		조하연 (진담 보조디자이너)	○ 국민정책디자인 서비스 과제 및 이행절차 코칭 지원 ※ 회의진행(보조), 회의록 작성, 아이디어 발굴 촉진, 성과보고 작성 등
담당관	사업 및 국민정책 디자인 지원총괄	정일선 과장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학교 내 불법촬영 근절·예방 정책 총괄 관리 ※ 국민정책디자인 과제 추진 성과를 활용한 학교 불법촬영 정책 고도화
	사업 및 국민정책 디자인 지원관리	전건우 사무관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학교 내 불법촬영 근절·예방 정책 기획 추진 ※ 국민정책디자인 과제 지원 관리, 회의결과 보고, 디자인단원 위촉 등
	사업 및 국민정책 디자인 지원실무	이준세 주무관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학교 내 불법촬영 근절·예방 정책 실무관리 지원 ※ 국민정책디자인 과제 관리실무, 회의준비 지원, 디자인단원 위촉 등
	사업 및 국민정책 디자인 지원실무	김민지 주무관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학교 내 불법촬영 근절·예방 정책 실무관리 지원 ※ 국민정책디자인 과제 관리실무, 회의준비 지원, 디자인단원 지원 등

나. 국민정책디자인 추진 성과

< 국민정책디자인 활동 목표 >



< 국민정책디자인 활동 4대 성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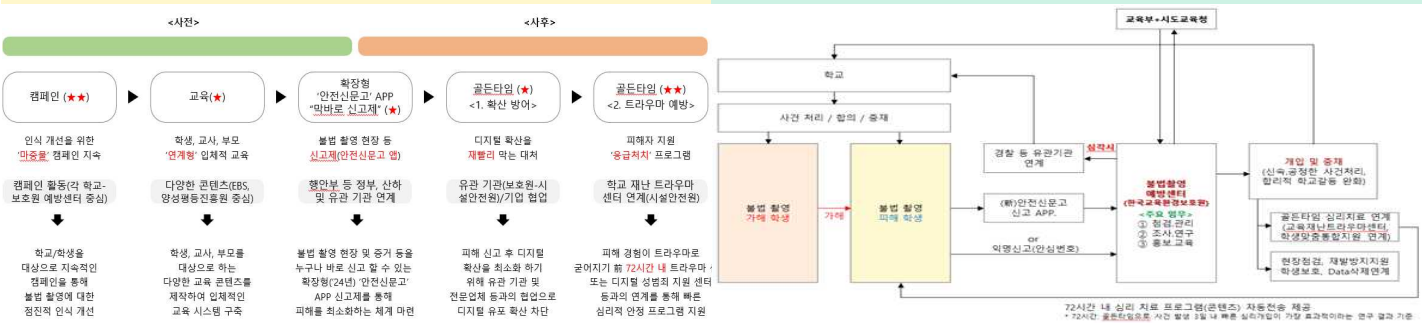


1) 『학교 불법촬영 예방센터』 중심의 '디지털 성범죄' 신속 지원체계 모델 개발

- 국민정책디자인단이 교육 수요자의 인식 개선을 중점으로 하는 '불법촬영 없는 안전한 학교 모델'을 함께 디자인하고, 특별교부금 신규사업에 선정되어 지속 가능한 '신속 지원모델'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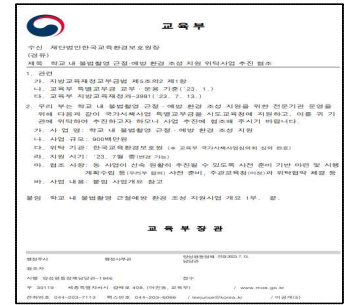


「학교 불법촬영 예방근절」 범국민 캠페인 & 플랫폼 구축 「학교 불법촬영 예방센터」 중심의 신속 지원체계 모델



- 교육부 3차 특·교(9억원, 확보) 신규 지원을 통해 '학교 불법촬영 예방 지원센터' 지정·운영
- * '23년 3차 특별교부금 신규사업 확정(9억원) → '24년 사업비 증액(10억원) 등 지속 확대

- 「학교 불법촬영 예방센터」 설치·운영(상설)으로 체계적 지원모델 개발 가능 **체계성**
 -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신규사업으로 한국교육환경보호원(오송) 內 ‘불법촬영 예방센터’ 설치



[한국교육환경보호원 내 ‘불법촬영 예방센터’ 설치 조직도] 불법촬영 근절·예방 관련 제3차 학교 내 불법촬영 근절·예방 환경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지원 확정 조성 지원 위탁사업 추진 협조

2) 설문조사 및 아이디어 발굴 등을 통한 정책의 ‘혁신적 기획’ 과 ‘현장 실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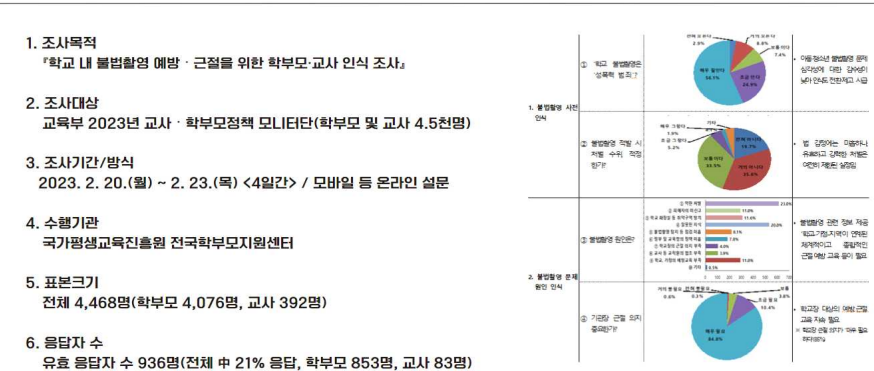
- 학부모·교사·학생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국민정책디자인단 활동 등을 통해 현장 ‘인식 개선 우선’ 중점관리 의제화*, 일선 학교의 학생주도형 인식개선 캠페인** 실행
 - * ‘불법촬영’ 사안이 → ‘성범죄’ 사건으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고, ‘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학교 내 갈등완화’ 정책과도 연결되는 체계적이고 신속한 처리 플랫폼 필요성을 발견하여 교육부 중점과제로 지정관리
 - ** 부산시 관내 초·중등학교, 건국대 등에서 '23. 10末~11初 기간에 학생 주도형 캠페인 개최
 - 교육 구성원인 학생·학부모·교사가 참여한 국민정책디자인단이 현장 수요에 맞는 ‘불법촬영 없는 안전한 학교 모델’을 디자인하므로 ‘지속 가능한’ 혁신으로 범용성 강화

- ‘교사·학부모정책단’ 4.5천명 설문조사 결과·분석을 통해 합리적 대안 발견 **창의성**
 - 기존의 ‘적발위주’ 대책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 다른 관점의 정책 대안 고려가 어려웠으나, 적시적 설문 조사를 통해 합리적 대안인 불법촬영 지킴이 <협업 시스템> 디자인 설계

※ 기존 단속적발위주 하향식 대책의 한계에서 (19~23년 적발 사례 0건) 설문조사(23.2) 및 시도교육청 학교의 의견 등을 종합 → 대안 도출을 위한 과학적 진단 → ‘지속 가능한 국민 참여형 예방근절 정책’으로 전환

특히,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주체가 적극적으로 참여·주도 + 전문가와 민간 컨설턴트가 행정 지원 정책 리모델링 → 교육 현장과 학생 맞춤형 근절·예방 정책 디자인

[국민공감] 학교 내 불법촬영 예방 등을 위한 학부모/교사 인식 등 설문조사 (23.02)



- 시범학교 방문, 학생 캠페인 참여 등 ‘현장 공략형’ 적극 행정을 통해 관계부처 참여·협업 유도
국민정책 기획·홍보·실행 공모과제(행안부 1건, 문체부 3건) 도전 노력 등을 통해 필수 예산 등 자원 확보

'불법촬영 없는 안전한 학교 캠페인' 경기광덕초 현장방문



'불법촬영 없는 안전한 학교 캠페인' 건국대학교 현장방문



대학 불법촬영 근절 학생주도 캠페인 04.26

대학 불법촬영 근절 정부-대학-지역 간담회 04.26

* 교육부총리 이주호, 국회의원 이태규간사, 행안부, 광진경찰서장, 서울 경기 부교육감 등

❖ (초등-교육청) 교육부·경기교육청 공동으로 학생 주도형 '불법촬영 근절·예방 캠페인'을 하는 일선 학교^(3.18, 경기광덕초교) 방문 시, 인성담당 교사의 열정적 지도 노력과 참여한 초등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에 '교육분야 디지털 성범죄' 근절 의지와 지속 가능성을 재확인

❖ (대학-지역) 국회의원(교육위 이태규, 교육부총리 및 부교육감(서울 경기) 등) 정계·교육계 주요 인사들이 불법촬영 없는 '안전한 캠퍼스 조성' 캠페인을 하는 건국대^(4.26) 방문 시, 학생들이 간담회 및 캠페인에서 '지역과' 대학이 연계된 새로운 개념의 '안전한 캠퍼스 모델'을 제안

○ '교육주체'(학생·학부모·교사)가 참여하고 주도하는 지속 가능하고 민주적인 代案 모색 확장성

- 공동체의 역할과 교육에 기반해 '불법촬영에서 성범죄'로의 예방 및 '정책의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시스템적 피해 신속지원 체계 필요성과 학교 내 갈등 완화에 필요한 중재 모델 등을 발견함

'국민정책디자인단' 발대식



'NO촬영' 국민정책디자인단 발대식 06.08



학교 불법촬영 근절 예방 정책 설명 06.08

(국민참여) '불법촬영 없는 안전한 학교 모델' 디자인을 위해 6.8부터 학생·교사·학부모 등 국민 15명이 자발적 참여로 '국민정책디자인단' 구성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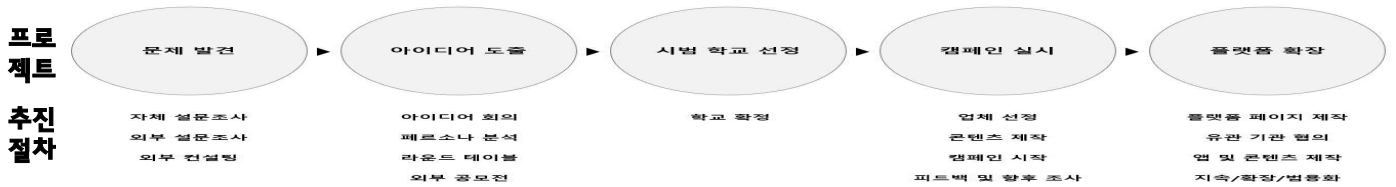
3) 국민정책디자인 서비스 운영을 통한 정책의 '국민공감' 및 '실효성' 확대

○ '문제 발견'에서부터 '솔루션 마련'에 이르기까지 쏠 과정을 학생 등 국민의 눈높이에서 代案*(대안) 정책의 공감성·편의성·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함

* 새로운 관점의 '불법촬영 근절·예방' 대책의 핵심은 첨단 탐지기 도입 등 기존의 '적발 중심'이 아니라, 학생 등 교육 주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하는 사회연대(가정-학교-지역사회) 활동을 통한 '지속 가능성'

- '인식개선 캠페인' + '플랫폼 확장' 병행 추진으로 ➡ 정책 실효성* 확대

* "기존 점검 대책" + "국민정책디자인단" 모델안 ➡ 자발적 참여한 국민 주도로 학교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정책 공급안 마련(수요자인 학생 등 국민이 정부와 함께 꼭 필요한 정책을 직접 마련해 '지속 가능성' 담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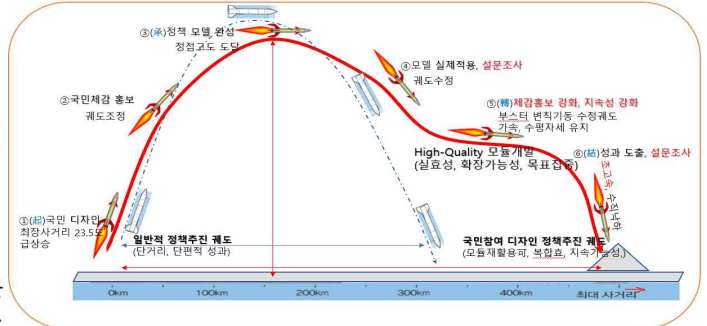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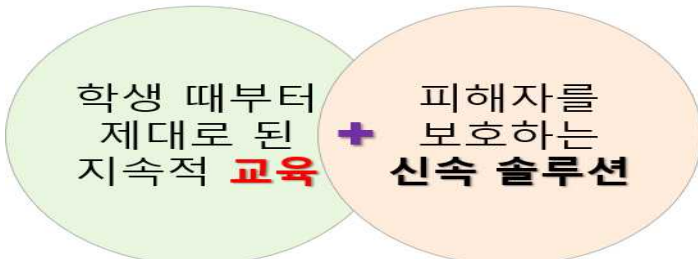
국민정책디자인 운영 前 (AS-IS)

- (단속 행정) 적발 시 처벌로만 단죄하는 행정 편의 차원의 전형적인 '보여 주기식' 대책 일색
- (부정형 회피) '불법촬영 = 화장실'로 직결되는 학교 공간의 '부정적 인식'이 만연한 현실
- (저효율 답습) '정부 정책'과 '일선학교 시책'이 따로인 '주관적 안심 조치'만 반복되고 답습

국민정책디자인 운영 後 (TO-BE)

- (참여 행정)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주체의 참여로 공감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연대 운동'
- (긍정형 공감) 학교 쏠 공간은 우리사회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라는 인식으로의 대전환 가능
- (참여형 혁신) 국민이 함께 만드는 정책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창조적 긍정 변화' 기대

○ '혁신적 代案 정책'을 투트랙(Two Track)으로 추진하되, 매 추진 단계별 수시 검증 효율성



▶ 그래서 우리는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예방 교육**과 불법촬영을 경험했을 때 **빠른 지원**이 가능한 **代案**을 **프로젝트**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 '인식개선 캠페인' + '플랫폼 확장' 병행 ➡ 정책 실효성 확대

['No찰 Sokut' 정책효과 극대화 방안]

- 실현 가능한 '소통 아이디어 공모전'의 대국민 검증 절차를 통해 '국민참여 代案 정책'에 대한 신뢰도와 국민 관심도를 높임

2023 국민참여 정책소통 홍보과제 공모전
교육부 최초 장려상 수상

(문체부) 국민참여 정책소통 공모전 포스터 (교육부) 국민참여과제("NO찰") 공모전 수상

2023 국민참여 정책소통 공모전 장려상 수상

1 사업명 불법촬영 없는 학교
2 대상 초·중·고 학생
3 목표 대상 타겟의 라이프 스타일 분석, 일상 속 자연스러운 노출 유인, 은모프라인 디자인도 활용

슬로건: '침바지' - 청소년들은 바른 것만 찍지~!

[1안] 인센네이션 이벤트 [2안] 오할만 챌린지 [3안] 기업(카카오톡) 협업

청소년들의 놀이 문화를 통한 홍보

※ '불법촬영' 근절·예방 관련 교육부 자체 예산 및 인력 등 **가용 자원이 전혀 없어**, 자체 예산 일부(국 수용비)까지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열악한 상황이라 **타 부처 예산 활용 극대화** ➡ ① 2023. 국민참여 정책소통 홍보과제 공모전(문체부) **장려상 수상**(교육부 최초), ② 2023. 국민정책 디자인 서비스과제 공모전에서 **최종 선정**(행안부), ③ 2023. 국민여론조사 정책과제 공모전에서 **최종 선정**(문체부)

○ 페르소나(피해자 경험 접근), 라운드 테이블(다양한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현장 맞춤형 정책 발굴** 실용성



[페르소나를 통한 피해자 경험 접근]

[라운드테이블을 통한 예방아이디어 발굴]

4) 부처·유관기관 간 중장기적 협업 강화로 '호혜협력' 및 '공익증진'

○ '불법촬영' 문제를 넘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 협업 주도

- 행안부(안전개선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심리안정화팀) 등과 '안전신문고 App' 리뉴얼 및 피해자 신속지원 '트라우마센터 운영' 노하우 등에 대해 적극적 협업 약속(9.14, 9.26)

※ 학교 불법촬영 사안 등 우리사회 '디지털 성범죄 근절·예방'을 위해 학생뿐만 아니라, 국민안전 총괄기관인 행안부·경찰청·지자체 등도 함께 협업하여 '안전한 사회구현', '공익증진'에 기여



[교육부-한국교육시설안전원(심리안정화팀) 실무회의(9.14)]

[교육부-행정안전부(안전개선과) 실무회의(9.26)]

- EBS(지식채널e)와 협업하여 '불법촬영 근절·예방' 방송콘텐츠를(2부작) 제작·송출(11초)하고, 부산시교육청과 협업해 제작된 캠페인 포스터를 전국 학교에서 (무료)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안부와 협의해 '2023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전'에 학교도 수상 대상에 포함시켜 공모전 사상 최초로 학교 부문 수상사례(은상, 대구태암초, 상금 100만원)가 배출됨

참고1 2023년 「제25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선정 결과

□ 시상 개요

- (일시/장소) '23. 10. 16(월) 14:30 /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19층
- (참석인원) 100여명(화장실문화시민연대 대표, 수상기관 임직원 등)
- (시상개소) 27개소
- (대통령상(대상) 1, 국무총리상(금상) 1, 장관상(은상) 동상 15, 화장실명대상(특별상) 10
- (부상내역) 상패 및 시상금(19백만원) 지급
 - 대상(1) 300만원, 금상(1) 200만원, 은상(5) 100만원, 동상(10) 50만원, 특별상(10) 40만원

연번	관역	분류	신청기관	화장실명	준격
1	서울	국립공공기관	서울특별시립국립중앙도서관	윤일택공원 평화의문 B화장실	대상(대통령상)
2	경기	민간법인	(주) 에이스서비스	안산(인천방향)호계소 화장실	금상(국무총리상)
3	대구	지자체	대구태암초등학교	The 깨끗! The 안심! 화장실	은상(장관상)

[EBS(지식채널e) 1TV로 송출될 방송콘텐츠] [부산지역 웹툰작가에게 제작한 포스터] [태암초 은상작, "The 깨끗! The 안심! 화장실"]

- ※ EBS(지식채널e) 협업으로 불법촬영 근절·예방 콘텐츠를 제작 송출(11초 2부작)하고, 학생·교사·전문가 등 국민이 디자인한 정책 성공모델을 적용 발전시켜 지역사회와 전국 학교로 캠페인 확산 예정(No촬영 브랜드화)
- 교육주체의 '능동적 참여'와 '인식개선 노력'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뿐만 아니라, 관련 조례 제·개정 등 지자체의 제도개선 노력도 독려하고 있음
- 특교 사업(23~25년) 연구과제를 통해 시도교육청별 관련 조례 검토 및 보완 예정
 - * 그간, 시도교육청에서도 조례 제·개정을 통해 불법촬영 근절·예방 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나, 실효성 낮은 점검 물량에만 치중하거나 사문화된 규정 등으로 부실한 대책 여전

< 학교 내 불법촬영 근절·예방 관련 시교육청별 조례 제개정 현황(23.3.) >

조례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①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조례」	○	○		○		○		○										5
② 「화장실 관리 조례」	○	○		○	○	○	○				○	○	○	○	○		○	13
③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조례」	○		○	○					○	○	○	○			○	○		9

다. 국민정책디자인 운영 시 미흡한 점 및 향후 개선방안

1) 국민정책디자인단 제반 활동 지원 관련 문제점과 개선(안)

- '학교 불법촬영 근절·예방' 혁신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민정책디자인단은 각급 학교 학생들이 정책 수요자로서 핵심 참여자이나, 학기 중에는 참여를 요청하기 어려웠고, 저학년 학생들은 과제 이해와 몰입도를 유지하기 곤란

- ➔ **(개선안)** ① 학생·전문가 등이 편리하게 수시 회의할 수 있는 **대면 상설공간***을 마련, ② 비대면 참여도 상시 **‘모바일 플랫폼 채널**’**을 열어 소그룹 아이디어 회의 등 기회 제공
 - * 디자인진흥원이 권역별 거점지구에 소규모 회의실을 단기 임차해 회의 및 활동 지원
 - ** 원격 Zoom 채널, 소그룹SNS, 아이디어멘토링 채널 등을 운영해 원격 활동 지원
- **‘학교 불법촬영 사안’은 부정적 섭인견으로 국민정책디자인단에 참여할 만한 정책 수요자, 학교 및 (공공)기관 등의 ‘협업 파트너’의 섭외가 매우 곤란하였음**
- ➔ **(개선안)** 국민정책디자인 과제 1차 선정 시, 과제 필요성 대비 정책수요자·전문가들의 관심이 저조하거나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운 과제들은 **대국민 사전 설명회나 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수단*이나 멘토링** 서비스** 제공
 - *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시급 과제임에도 정책 대상기관 내부에서는 기피 또는 후순위 과제로 미뤄질 수 있어, ‘행안부-진흥원’이 **후원자적 관점에서 중점 관리과제 지정 협조 요청**
 - ** 신규 기관은 과제 수행 시, 디자이너 또는 전문가에게만 **과의존**하고 정책수요자의 의견 등은 간과하는 경우 이른바 **‘그들만의 정책’**이 될 수 있으므로 **현행 정기 2회 디자인 컨설팅에 ‘정책수요자’나 ‘기존 경험 기관’도 원격 참여하는 등으로 멘토링 서비스 확대**

2) 시스템 구축 관련 문제점과 개선(안)

- **‘불법촬영 근절·예방 정책’** 관련 국가시책 사업이 국민정책디자인단 활동 후반부^(9월)에야 본격화되어 **시스템 구축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하게 제한적**
- ➔ **(개선안)** 디자인단 활동과 정책사업 간 기간이 **불일치해 성과를 구체화하기 어려운 경우, 정책 단계별 예측 가능한 설계·청사진^(blueprint) 제시** 등으로 같음
 - * 문제 처리 절차나 사례를 Actor별 **설계·청사진(blueprint)** 등으로 모델화하여, 활동 주기별 또는 서비스 단계별 **Supporter나 세부 솔루션을 청사진과 매칭시켜 제시하는 것으로 충분**
 (예 (정책수요자 활동주기별): 인식 개선 - 예방 학습 - 문제 대응 - 사고 시 조치 - 사고 후 관리 등
 ↓ ↓ ↓ ↓ ↓
 시) (시스템 서비스 각 단계별): 학생캠페인 - 교육 기관 - 신문고 App - 골든타임 확보 - 사회관심도 유지)
- 전문가가 포함된 활동이지만,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플랫폼 구축의 핵심요소**(^{‘학교불법촬영 예방센터’})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미흡**
- ➔ **(개선안)** 정책 특성상, 국민생활에서 **공익성이 크고 중장기 지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차년도 디자인단 선정 시 가점을 줌으로써 수요자 참여 보장**
 - * 학교 내 불법촬영 문제는 ‘학교폭력’의 범주이지만 사안처리 절차 상 지원개입·갈등 관리에 필요한 요건, 전문성 등이 달라, ‘학교불법촬영 예방센터’의 **중간 (공공)조정관 역할이 기대됨**
 (예 신고 접수시, 센터가 중간 조정관 역할을 하여 전문가들이 불법촬영 관련 **학교 문제에 신속 개입함으로써 교사의 부담을 낮추어 최근 이슈인 교권을 보호**하고, 학교뿐만 아니라 **국민갈등 완화를 위한 국가·공공의 시) 모범적 역할 모델**을 제시할 수 있고, 교육부만이 할 수 있는 **정책의 Testing bed 역할 기대 가능**

5 향후 추진계획

가. ‘인식개선 캠페인’ + ‘플랫폼 확장’ 병행 추진 → **정책 실효성 확대**

1) 교육주체가 주도하는 ‘인식개선 맞춤형 공동 캠페인’ 등 전국 확산 전개

- ‘학교 불법촬영 예방센터’ 위탁사업 중 현장지원 활동을 통해 인식전환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콘텐츠를 제작하여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로 보급
 - 유관기관(한국교육시설안전원, EBS) 협업을 통해 개발한 교육자료나 콘텐츠를 모바일로 제공
- ‘불법촬영 관련 국민의식’ 조사를 초·중등 및 대학생 대상 추적 실시할 예정
 - (주)한국갤럽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모바일 설문조사^(23.11. 및 '24.7. 2회 추적조사)를 통해 인식개선 효과를 증명하고, 다른 사회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응용하는 확장 가능성 판단
 - ※ 초·중등 3개교(경기·부산), (종합)대학 2개교 학생 1,500명을 2년간 표본 추적 조사하여 학생·교사·전문가 등 국민이 함께 디자인한 ‘학교 맞춤형 불법촬영 근절·예방 공동 프로젝트’의 인식 전환 효과성 등 검증

2) 『학교 불법촬영 예방센터』 중심의 ‘디지털 성범죄’ 신속 지원체계 조직 시스템 구축

[연계 통합 신고체계로 사건 접수 후, 사안 심각성을 신속·정확히 판단하여 골든타임 내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한 후, 피·가해자 간 공정한 중재 등을 지원함(단, 심각 사안은 경찰과 연계하여 처벌 솔루션 가동)]

① 학교 내 불법촬영 등 성범죄를 근절·예방 ② 안전신문고 앱과 연계하여 불법촬영 사건에 ③ 경한 학교 불법촬영 사건에 대해 처벌 보다 하기 위한 신고 수단이 미비하여 기존 플랫폼 대한 신속한 신고 체계를 갖춤으로써 학교 내 경계예방 목적으로 APP 활용이 필요하므로 (스마트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을 활용한 연계 통합 신고 사건 발생을 미리 경계예방할 수 있고, 피해를 17개 시도교육청에 학교 불법촬영 등 성범죄의 체계 마련 즉시 보호·지원할 수 있는 ‘골든타임 확보 기능’ 안전신문고 연계 신고안을 제의 중^{10.5. 협의회의}

- (정책 사각지대 예방)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학교 불법촬영 예방센터’는 정책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기관의 특성을 연계하고자 학교·행안부·경찰·지자체·여가부 등 유관기관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피해자 신속 지원이 가능한 합리적인 ‘공동 대응 네트워크’ 조직 시스템을 구축 본격 착수(‘23.11.~’25.)
 - 디지털 성범죄 관련 자치 조례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불법촬영 예방 규정을 보완하고, 시도교육청과 함께 ‘피해자 보호 및 공정·신속한 사건 처리 매뉴얼’ 마련
- (일상적 돌봄체계) 학교 내 불법촬영 사건으로 피·가해자(학생·학부모·교사 포함) 다툼 시 ‘안전신문고 App^(행안부)’과 ‘학교 불법촬영 예방센터’의 돌봄 시스템을 상호 연동하여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학교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시킴
- (점검조사) “2023-2학기 학교 불법촬영 점검 실태” 전수조사 및 대책 마련 예정^(11월)
- (사업운영) “학교 불법촬영 예방·근절 환경 조성 지원 특별교부금 사업”추진(‘23.12월)
- ※ 취약 구역은 보강하고, 개방 공간은 예방하는 등 학교의 기존 일상적 예방과 전문적 탐지를 병행한 ‘점검 체계 다중화’ 방안을 실행하도록 권고하고, 학교업무 경감 등 현장 밀착형 방안도 병행적 모색

나. 향후 예산확보 **국가시책 특교 사업비: ('23년) 900백만원 → ('24~'25년) 1,000백만원**

1) 학교 불법촬영 현장점검 컨설팅 및 인식개선 맞춤형 캠페인 등 지원

○ (특교사업) “2024년 불법촬영 근절·예방 환경조성” 제1차 특교 사업 자금 교부^(1~2월)

● 특교 사업 추진 효율화 및 성과 도출 등을 위해 3개 유관기관별 역할에 따른 액션플랜 구체화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충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생활교육팀)	한국교육환경보호원 (학교불법촬영예방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추진 가속화(당초 일정보다 사업비 배정, 인력채용 등의 일정이 순연되어 사업 성과 도출 등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필요) 특교 사업(근절·예방 캠페인 및 점검 대상) 시범학교 선정·운영 필요(※초·중등 각 1교씩 지정 협조) 국민정책 디자인단^(6~11월)이 기획해 추진 중인 인식개선 방안 및 홍보 기획 등과 연계·협업해 정책효과의 시너지 창출이 필요함 ※ 일선 학교 캠페인 포스터 제작·활용 독려 (→ 자원 공유를 통해 예산절감,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법촬영 점검단 구성·운영(안) 구체화 필요(촉박한 일정 고려) 학교 불법촬영 예방·근절 콘텐츠 개발 및 학교 보급의 구체적 방안 ※ 시도 및 학교별 아이디어 공모, 경연대회 등 다양한 캠페인 추진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담인력 완비 후 현장 착근 구체화 단기간 내 사업추진 효율화 노력 ※ 점검단 구성·운영(안, 시도 네트워크 구축, 설문조사, 연수과정, 캠페인 공모 등) 일선 학교 관심 및 참여 유도책을 마련하고, 불법촬영 점검단 출범 등을 위한 각종 캠페인 행사 등 현장 맞춤형 정책 이벤트 기획·홍보 ※ 전국 초중고 시범학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활동 내용의 구체화 필요

○ (과제수행) “국민참여형 ‘정책 기획·홍보 협업 과제^(4건)” 공모 재추진^(24. 4~12월)

[행안부] ① '24. 국민정책 디자인 서비스과제 공모 선정, 수행 중(행안부 4~11월, 11조 발표대회 개최)
[문체부] ② '24. 국민참여 정책소통 과제 공모전 수상(문체부, 8월 장려상 수상), ③ '24. 정책홍보 기획 민간 컨설팅 과제 수행(문체부, 7~8월), ④ '24. 국민여론조사 과제 수행(문체부, 8~12월)

※ 국민참여 정책 디자인과제 성과 발표 및 학교 캠페인 우수사례 등 발굴·확산 등 현장 공략(10~11월), 홍보 컨설팅(8월) 및 국민여론조사(11월)를 활용한 불법촬영 근절 국민참여 정책소통 홍보물 제작·보급(9~12월) 등

2) 『학교 불법촬영 예방센터』 중심의 ‘디지털 성범죄’ 신속 지원체계 구축

○ (특교사업) “2023년 불법촬영 근절·예방 환경조성” 제3차 특교 사업 자금집행^(1~2월)

○ (특교사업) “2024년 불법촬영 근절·예방 환경조성” 제1차 특교 사업 자금교부^(1~2월)

● 주요 3개 분야 세부과제에 집중하여 단기간 내 사업추진 효율화 및 가시적 성과 도출 예정

① [인식확산] 250백만원	② [점검·관리] 400백만원	③ [조사·연구] 25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구성원 대상 예방·근절 교육자료 개발·보급, 대국민 인식확산 콘텐츠 개발 및 캠페인 실시 ※ ‘가정-학교-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합동 예방활동(지역사회 캠페인 홍보기획 등) 지원, 학교단위 문화개선 활동 모델링 및 우수사례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특성에 맞는 점검 전문 인력 양성 및 권역별 교육청-전문기관 연계 합동점검 실시, 학교별 점검 및 예방·근절 컨설팅 지원 ※ 주기적인 현장 점검 결과, 사례 관리 및 점검 이슈·개선 과제 공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법촬영 점검·조치·관리 현황 및 불법촬영 범죄 발생 현황 등 실태조사 체계 구축, 학교 내 불법촬영 예방 정책 기초자료 개발 ※ 학교 내 취약지역 점검 매뉴얼시리즈 개발, 학교 내 불법촬영 발생원인 진단 및 개선 효율적 점검·관리 등을 위한 단계별 연구 추진

('23.11~) 하반기		('23) 하반기~('25. 계속추진)	
전문기관 지정 →	② 현장점검지원	조사/컨설팅 →	③ 조사·연구 + ① 인식확산·② 점검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운영관리 전문교육 점검활동, 모니터링	불법촬영 발생원인 진단·분석	교육연수 실태조사 자료개발 정책연구
	점검체계 구축·정립	(현안공유) 시도교육청 실무협의회 운영	
	학교맞춤 활동 매뉴얼	(전문 컨설팅) 전문가 컨설팅단 운영	

○ (과제수행) “국민참여형 ‘정책 기획·홍보 협업 과제^(4건)” 본격 추진^(24. 4~12월)

<p>1</p> <p>부도 자료</p>	<p>2023.03</p> <p>경기도교육청 홍보 예방 관련 기사</p> <p>경기도교육청, '불법촬영 없는 학교 만들기' 추진</p> <p>학교, 교육청, 교육부, 유관기관 협력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B 관상학교 운영으로 경기형 IB 프로그램 위한 조속 높다</p> <p>이주경재</p>  <p>이주경재</p>	<p>2023.03</p> <p>경기광덕초등학교 홍보 예방 관련 기사</p> <p>'불법촬영 없는 학교 만들기' 추진... 학교·교육청·교육부유 관기관 협력</p> <p>광덕초등학교, 불법촬영 근절 위한 다각적 대책 마련</p> 
<p>2</p> <p>부도 자료</p>	<p>2023.04</p> <p>건국대학교 홍보 관련 기사</p> <p>'불법촬영 없는 대학' 건국대, 안전캠퍼스 우수사례 선정</p>  <p>건국대학교가 20일 교육부 안전주간을 맞아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및 국회, 학생들 대상으로 건국대 안전캠퍼스 현황 보고 및 현장 방문,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p>	<p>2023.10</p> <p>부산시교육청 홍보 관련 기사</p> 
<p>3</p> <p>우수 사례 선정</p>	<p>2023</p> <p>상반기 교육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p> 	
<p>4</p> <p>방송 콘텐츠 제작</p>	<p>2023. 11월 방영 예정!</p> <p>EBS 지식채널 E</p>  <p>100일 꿈의 날개 1부 달콤한 꿈을 다시 꿀 수 있을까?</p> <p>11.08.수요일 24:46 2부작 방영 예정!</p>	

캠페인
브랜드화

'NO촬! 찍지 마요마' 정책



5

캠페인
브랜드화

불법촬영 포스터 제작



6

캠페인
브랜드화

부산시교육청 웹툰 홍보물 제작 / 버스승강장, 스크린도어 게시

웹툰 작가와
협업해 로열티
없이 전국 학교
무상활용가능



※ 웹툰 작가? ※ 로열티 없이 무상활용 가능 ※ 전국 학교 무상활용 가능 ※ 부산시교육청



7

캠페인
아이디어 발굴



8

첨부1

국민정책디자인 활동 실적 및 단계별 산출물

□ 국민정책디자인 활동 실적

구분	일시	장소	참석자
1차	2023년 06월 08일(목) 14:00~16:00	교육부 대회의실 (정부세종청사)	국민정책디자인단원 전원 (총 22명; 전문가 6, 수요자 10, 디자이너 2, 담당관 4)
2차	2023년 06월 21일(수) 14:00~16:00	원격 Zoom회의	국민정책디자인단원 전원
3차	2023년 07월 07일(금) 14:00~16:00	원격 Zoom회의	국민정책디자인단원 전원
4차	2023년 08월 04일(금) 14:00~16:00	프렌차이즈 회의실 (서울종로)	국민정책디자인단원 12명 (컨설턴트2, 학생6, 교사2, 학부모1, 교육부1)
5차	2023년 08월 25일(금) 14:00~16:00	프렌차이즈 회의실 (부산서면)	국민정책디자인단원 10명 (컨설턴트1, 학생4, 교사1, 학부모1, 교육부3)
6차	2023년 09월 13일(수) 14:00~16:00	한국교육환경보호원 (회의실, 오송)	국민정책디자인단원 6명 (컨설턴트2, 전문가1, 교육부3)
7차	2023년 10월 16일(월) 16:00~17:00	원격 Zoom회의	국민정책디자인단원 6명 (컨설턴트2, 교육부3)

□ 국민정책디자인 활동 단계별 산출물

구분	단계별	주요 활동내용	산출물
1차	1단계 (이해하기)	① No찰 주제 확정 ② 단원 구성 완료 ③ 킥오프 및 팀 O/T ④ 서비스 디자이너 강연 & 공유	· 관련 정책 현황 공유 · 주제 공유, 계획 수립
2차	2단계 (발견하기)	① 설문조사 - 자제 및 외부 설문 2회 시행 - 학생과 성인들 대상 불법촬영 인지도 설문조사 ② 수요자 설문 조사 분석	· 현장 관찰, 인터뷰를 통한 숨겨진 수요자의 요구 도출
3차	3단계 (정의하기)	① 페르소나 / 고객여정 : 그룹 워크숍 ② 결과지 분석 및 분석 토대로 문제 정의 ③ 정책 목표 수립 ④ 행동 파트너 설정 · 확보 · 협약	· 수요자 문제점 분석 · 정책 방향 수립
4차	4단계 (발전하기)	① 아이디어 워크숍 ② 실행 hurdle 발견 ③ hurdle 해결(선결과제 해결)	· 정책 아이디어 만들기 · 정책 hurdle 제거하기
5차	5단계 (전달하기)	① 콘텐츠 제작 : EBS콘텐츠 / 포스터제작(캠페인) ② 행동 파트너 공동 실행 ③ 보고서 제작 및 제출	· 최종 정책 점검 및 실행

□ 국민정책디자인 활동 총평

- (虛卽通^{*허즉통}) 정책의 기존 답습을 과감히 바꾸기^(虛)로 결단하고, 한발 빠른 ‘현장 수요 파악’ 및 ‘현장공략형 적극행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정책 변화(變)를 모색함
 - 정부 정책은 일부 결함 가능성을 발견했다라도 기존의 방향을 바꾸려면 충분한 명분과 근거가 필요한데, 미리 준비한 설문조사 및 사회관계장관회의 중점관리 안전화 등을 통해 관계기관의 참여·협업을 유도하며, 이해관계자 저항 없이 ‘적시에 선회’할 수 있었고,
 - * 공박할 때 ‘기존의 틀을 벗어나야^(虛)’ 비로소 변화와 지속성이 담보(窮卽變+虛卽通^{허즉통} → 變卽通 → 通卽久)
 - 공공기관 대상 국민참여 정책 기획·홍보 등 공모과제^(행안부 국민정책디자인 과제, 문체부 정책홍보 기획 등 3건) 응모 및 선정 노력 등을 통해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었음
 - * 교육부에 새로운 방향의 ‘불법촬영 근절·예방 정책’ 추진을 위한 별도 예산 등 가용 자원이 全無하여, 실·국의 경비까지 당겨써야 할 열악한 형편이라 ‘타 부처 예산 활용’이 매우 절실하였음
- (정책소통 플랫폼 활용) 국민디자인단 운영 등을 통한 정책 공론장^(포럼/플랫폼) 활용
 - 기존 ‘적발 위주’ 대책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 다른 대안 고려가 어려웠으나, 진짜문제를 정의하는 등의 국민디자인단 운영을 통해 ‘현장 맞춤형 <협업 모델안> 디자인’ 설계
- (참여&협업 난항) ‘현장 공략형’ 적극 행정으로 관계 부처·기관의 참여 및 협업 유도
 - 불법촬영 관련한 선입견 등으로, 학교 및 (공공)기관 등 ‘협업 파트너’의 섭외가 곤란 하였으나, 교육부총리·국회의원^(이태규)의 시범학교 방문, 학생 캠페인 동참 등 ^(교육부총리)현장 홍보 기획을 통해 교육청, 정부, 전문기관 등의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협업을 이끌어 냄
- (수법적 公共중재자 모델) 불법촬영 관련 국민정책디자인 활동 성과보고 컨설팅^(중간·최종) 시, 국민디자인단 활동으로 교육주체에 대한 ‘인식개선’ 및 ‘근절·예방 신속 지원모델 개발’이 성공하게 될 경우, 디지털 성범죄 등 다른 사회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모두 기대
 - 단기간 내 학생·교사·학부모 등 교육주체의 능동적이고 적극적 활동을 이끌어낸 점, 불법촬영을 학교 안전과제로 발전시킨 점, 추후 ‘디지털 성범죄’로까지 확장하려는 정책 비전 등은 매우 우수
 - ※ 단, ^(시범형)중재자로서 ‘학교 불법촬영 예방센터’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유 뿐 아니라 합리적 역할·효과도 같이 제시해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국민정책디자인 활동 성과^(추가)**

○ **(사회가치 실현 성과)** 교육주체가 함께 만드는 정책의 '혁신적 기획'과 '현장 실행' 경험 축적

- 교육주체(학생·학부모·교사)에 대한 설문조사 및 분석, 국민정책디자인단 활동 등을 통해 중점 관리 사회문제로 안전 의제화*, 일선 학교의 학생주도 인식개선 캠페인** 실행

* '불법촬영에서 성범죄'로의 확산 방지 및 '국민안전 정책의 사각지대' 예방을 위한 학교 내 갈등완화 정책과 피해 신속지원 시스템 구축 필요성 발견 등으로 사회관계장관회의^(2.22) 중점의제로 지정관리 중

** 부산시교육청 관내 초·중등학교, 건국대 등에서 10末~11初 기간 학생주도로 다양한 캠페인 행사 예정

부산시교육청·학교 캠페인	<p>2023부산시교육청 양성평등 및 불법촬영 예방</p> <p>1 추진계획 (1) 홍보물 및 포스터 게시 가. 단위 학교 나. 부산시내 버스 승차대 (시청, 부산시장, 사면, 자갈치) 다. 지하철 2개소 (사면역 1,2호선 스크린도어) (2) 홍보 포스터 인종상 이벤트 (3) 학교를 찾아가는 이벤트 #찰스큐즈미</p> <p>2 기대 효과 (1) 학교 및 사회 구성원의 양성평등 및 불법촬영예방 인식 함양 (2) 대중적인 공감대 확산 캠페인을 통한 학교에 지대한 영향 고백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3) 학교를 찾아가는 이벤트를 통해 만드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p>	<p>#찰스큐즈미~!</p> <p>[STEP1] 홍보 웹툰 제작 </p> <p>[STEP2] 광고 홍보 게시 </p> <p>[STEP3] 학교 홍보 진행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흔들이 필요해요. 찰스! 버튼을 누르기 전에 동화를 구해요. 저 찍어도 되요! </p> <p>[STEP4] 교육청 홍보 예정 </p>			
	<p>건국대학교 인권서포터즈 캠페인</p> <p>1 사업명 디지털성폭력 없는 안전한 캠퍼스 조성 캠페인</p> <p>2 대상 건국대학교 학내 구성원</p> <p>3 내용 예술제 기간 캠페인 활동을 통한 캠퍼스 문화 조성 및 인권의식 제고</p>	<p>체험 프로그램</p> <p>디지털 성폭력 근절 슬로건 만들기 </p> <p>학내 인스타그램 계정 태그 </p> <p>불법촬영 탐지 카드 배부 &시연 프로그램 </p> <p>인권 관련 문구 삽입 물품 제작 및 배포 </p>			

- 교육 구성원인 학생·학부모·교사가 참여한 국민정책디자인단이 현장 수요에 맞는 '불법촬영 없는 안전한 학교 모델'을 디자인하므로 '지속 가능한' 혁신으로 확장 가능

○ **(국민참여 성과)** 불법촬영 근절·예방을 위한 '국민정책디자인 프로젝트' 추진 성과

○ **(아이디어 발굴)** 『학교 불법촬영 예방센터』 중심의 '디지털 성범죄' 신속 지원체계 모델 개발

- 학생·학부모·교사·전문가 등 다양한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정책디자인단'이 학교 구성원 및 교육 수요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중점으로 하는 '불법촬영 없는 안전한 학교 모델'을 디자인하고,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신규사업*에 선정되어 지속 가능한 '신속 지원모델' 개발

* (특별교부금 신규 +9억원 증액 심의내용) "불법촬영은 학생 안전에 직결되는 성폭력 범죄행위라 반드시 근절·예방되어야 하고, 학교 내·외 모든 자원과 요소가 결합되어 종합적으로 예방활동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시도교육청 및 학교 자체의 역할과 노력만으로는 이러한 활동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단순한 기존 점검·적발위주 예방책을 넘어 학생과 학교 구성원의 인식개선 활동을 중심으로 학교 공간 및 문화 개선, 학교 불법촬영에 대한 실태분석, 예방교육 및 지역사회와의 협업 등이 다방면으로 이뤄져야 하므로 국가시책 사업 필요성이 큼"(23.7.13)

- 교육부 3차 특.교^(10억, 확보) 신규 지원을 통해 '학교 불법촬영 예방 지원센터' 지정·운영

※ '23년 특별교부금 신규사업 확정(9억원, 3개년 추진) → '24년 사업비 증액(10억원) 지속

- (지속 가능한 협업) 범부처·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정책의 중·장기 '지속 가능성' 확대
 - 사회 연대(가정·학교·지역·국가)를 통한 '지속 가능한' 교육분야 디지털 성범죄 근절·예방 대책 시급
 - * **국정과제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 '범부처 교육현장 중점과제'로 지속 관리
 - 교육부가 불법촬영 문제를 넘어 '교육분야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 협업 주도
 - 행안부(안전개선과, 주소생활공간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심리안정화팀) 등과 '안전신문고 App' 리뉴얼 및 피해자 신속지원 '트라우마센터 운영' 노하우 등에 대해 긴밀한 협업 약속^(9.14, 9.26)

□ 국민정책디자인을 통한 정책개발 제언^(추가)

- (선택과 집중 지원 필요) '불법촬영 근절·예방 정책 모델은 학부모·지역사회를 매개로 국민 생활 속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예방하고 '국민 안전' 및 '공익 증진'에 기여하므로 지원 필수
 - (중·장기 지원 필요) 불법촬영 문제는 학생 등 교육주체 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 인식의 틀을 바꾸는 과정**이므로 '가정·학교·사회'의 관계 및 일상에서 **황과 종으로 신뢰를 축적하는 시간 필요**
 - (사회문제 해결) '불법촬영 문제'는 광범위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사안 중 일부에 불과하나, 교육주체와(학생·학부모·교사) 시민들의 자발적·적극적 참여와 인식개선을 통해 사회(가정·학교·지역)가 서로 연대함으로써 '불법촬영 없는 안전한 학교 모델'을 만들어 낸 성공 경험과 그러한 의지 및 가능성은 더 크고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음

< 「불법촬영 예방센터」 중심 신속지원체계 작동(안)>	< 기대 효과 모식도 >	
<p>● (처음부터 끝까지 ➡ Case by case) '학교 불법촬영에서 디지털 성범죄'로의 사회 문제 확산을 예방하고, 신속·합리적인 Case by case 피해자 지원·처리책 마련</p> <p>① 초동조치 (학생맞춤통합지원 연계, 72시간 골든타임 내 자동지원) ➡ ② 학생 보호 ➡ ③ 현장지원 (체계적예방) ➡ ④ 조사 연구 ➡ ⑤ 인식 확산</p> <p>⑥ '재난트라우마센터(한국교육시설안전원)' 지원체계를 응용한 '학교 불법촬영 근절·예방 정책' 체계 구축(호혜적 협업 및 사업성과 확대를 위한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p>	<p>지금까지는 (AS-I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가 제공하는 '깨끗하고 편리한 부속시설' • 적발되면 처벌해 단죄하는 '본보기식 대책' • 정책과 시책이 따로 가는 '그냥 답습 조치' 	<p>앞으로는 (TO-B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이 함께 만드는 '안전한 교육 생활공간' • 누구나 공감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 연대운동' • 정답이 아니라 질문이 바뀌는 '창조적 변화' 

* 갈수록 심화되는 빈부격차 등 양극화, 소득·교육 불평등, 지역 격차, 저출생 인구감소, 인종·종교차별 등의 문제들도 개인·국가가 단독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공동체의 연대와 경험 등이 해결에 필수 요건임

- (다부처 협력 지원) 범부처·유관기관 신뢰 증진을 통한 정책의 중·장기 '지속 가능성' 담보 필요
 - (국민안전 협업강화) 불법촬영 등 교육분야 성범죄를 근절·예방하기 위해 시민 안전의 직접적 업무 담당인 행안부·경찰청·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업해 안전한 사회 공익 증진
 - (정책 리더십 강화) 불법촬영을 넘어 '디지털 성범죄 근절·예방 정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전문기관들의 참여도 유도하여 협업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정책 리더십* 필수